

기 조 연 설

**세계의 친환경유기농업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

*World Trends of Organic Agriculture
and Korea's Track*

연사 : 김 성 훈 (S. H. Kim)

[상지대학교총장, 전농림부장관]

세계의 친환경유기농업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

金 成 勳

상지대 총장, 전농림부장관

I. 친환경유기농업 : 농촌어메니티의 핵심요소

먼저 최근 유럽 농산어촌 지역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과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골의 농촌다움(어메니티, amenities)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기차로 하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농촌여행은 폴 세잔느의 한 폭의 전원풍경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화창한 코발트색 푸른 하늘아래 노랗고 빨갛고 연분홍의 꽃들이 녹색 용단의 들판을 수놓고, 거기에 평화롭고 고즈넉하게 옹기종기 들어선 중세형 농가들의 가지런한 지붕들과 아기자기하게 배치된 농촌마을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한가롭고 넉넉한 프랑스 농촌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상쾌하고 고향같은 편안함이 안겨온다. 도회지에서 온 기차여행객들은 이 같은 아름다운 농촌풍경에 압도되어 거침없이 그들의 느낌을 표현한다. “이 세상에 공짜(점심)란 없다. 우리 도시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어 이들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유산을 지키고 보살피 주어야 한다.” 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스위스의 알프스 골짜기를 여행하노라면 만년설이 뒤덮은 정상 아래로 초록빛 초지가 이어지고 홀스타인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데 언덕 위엔 포도밭이 앙증스럽게 자리 잡고 마을 집집마다 뜸하게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듯 빨갛고 노랗고 보랏빛 꽃들로 주렁주렁 베란다를 장식해 놓고 있다. 비교적 큰집 지하창고에선 포도주 익는 향기가 은은하고 같은 지붕아래 민박집을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민 여행객들은 “오지의 농가들일수록 보다 많은 정부지원(소득보상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속삭인다. 축제날이면 산골짜기 마다 각기 다른 의상과 전통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친환경유기농 식품과 축산가공품을 나누며 서로 간에 친목을 돈독히 한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찾아온 외지인들의 발길과 돈주머니를 가볍게 한다.

오스트리아 융프라우 산록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열심히 겨울준비용 목초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가 다름아닌 장관급 오스트리아 후작(백작 다음으로 지체가 높은 신분)임을 알게 된 우리 일행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2층 목제주택 아래층은 젖소들의 착유실과 주인 내외의 방이 붙어 있고 2층 한 쪽은 목초 저장시설 그리고 연달아 14개의 침대가 들어 있는 방 6개, 그리고 주방과 식당이 있다. 알프스 일대에선 어느 나라건 대체로 침대가 15개 미만일 경우 민박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친환경유기농 요구르트와 청량음료, 유기농 과일을 들고 나온 복스런 아주머니 역시 오스트리아 귀족이다. 장차 농업 마이스터(Meister)가 되기를 꿈꾸는 고1 짜리 아들은 자기 몸집보다 50배도 더 되는 목초운반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어른 일의 한 몫을 톡실히 해낸다. 여름엔 산록 숲 사이 경사지에 만든 초지에서 목초를 기르

고 겨울엔 자연스레 스키 코스로 바뀌어 민박손님이 연중 그치지 않는다. 정부지원(직접소득보상)도 평야지 도시근교 보다 훨씬 많아 심산공곡임에도 “유기농사+유기축산+자가 또는 공동의 식음료품 가공판매+민박+정부지원금”으로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웃 골짜기 동네는 문화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어메니티 수입에 의한 살림살이가 더 넉넉해 보였다. 알프스를 끼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의 농산촌 살림살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친환경유기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점은 똑같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각각 만년 1~3ha의 소규모 유기농업 가족농들은 그들이 7~9년 걸쳐 애써 성취한 유기농업 실천사례를 설명하면서 숭한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우리는 유기농업을 통해 땅의 생명을 살리고, 강물을 깨끗이 하며 공기를 맑게 하여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 도시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각종 위해(危害)요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명(召命)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도시소비자들이 우리 가족과 농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살림살이가 가능하도록 지역소비를 우선하고 학교급식자체 공급권을 부여하는 등 소득 증대 기회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다. 지역사회가 유기농가를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사회와 유기농지원(Community-Support-Agriculture)” 운동이 이 북미 전지역에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정부도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 운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늘과 땅과 강과 생명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을 살리는 유기농운동은 진정 멋있고 자랑스럽다.”

이들 선진국외에도 영국의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지원 및 농촌다움 지킴이제도(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라든지, 뉴질랜드의 ‘Rodney District Plan 2000’에 의한 친환경유기농업 특성과 어메니티 살리기 운동이 민관합동으로 농촌지역을 밝게 하고 있다. 독일은 Biotop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생태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전국 기초자료를 data base해 친환경생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자연별 공원별로 브랜드화하여 농산어촌의 친환경어메니티를 소중한 농촌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예 1986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농촌쾌적성(amenity) 대회를 시행하며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산어촌 어메니티 운동은 이렇듯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업 등 다양각색의 어메니티(amenities)를 지역별 농가별로 한데 묶어 자산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도시민의 웰빙 욕구에 접목시키는데서 농촌살길을 찾고 있다. 이같은 자발적인 농촌어메니티 육성과 도시 웰빙수요와의 만남을 정부가 직간접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진국가” 건설의 신개념이 되고 있다. 선진국가란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 살든, 소득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에 별로 차이가 없는 나라를 뜻한다는 철학이 정부와 사회 각계 지도층 모든 분야에서 공유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업이 안전한 국민기초식량과 섬유류를 풍족하게 공급하는 식량안보기능 이외에도, 환경보전 및 홍수조절기능, 자연경관과 문화전통을 보존하는 기능, 지역공동체의 활력유지와 식품안전 보장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도 이를 두고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선진국모임(OECD)와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원적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라고 별칭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이 사회경제 발전에 중대한 비교역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

서의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책실패현상으로 인해 그 자체에 내재한 본질적 가치, 즉 ‘농촌다움(amenities)’마저 흔들릴 운명에 처해 있다. 일찍이 선인들이 믿어 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은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바꾸어 말하여 식량안보기능과 다양한 비교역적 공익기능을 아우르는 농촌다움을 일컫는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예컨대 환경생태계 보존기능, 생물 종(種)의 다양성 확보, 자연재해 예방기능, 자연경관 보존, 농촌문화와 전통, 지역공동체 사회의 활성화 기능 등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아직 화폐적 가치로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 식량의 안전성과 안전성 확보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 절대적 중요성은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고유한 가치를 정부와 도시부문에서 먼저 인식하고 농촌주민의 소중한 자산과 소득원으로 키우는데 수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서구 등 선진국 정부들은 농업부문이 전체 인구나 GNP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할 정도로 농촌과 농업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요인이 다름아닌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시부문에서 사람다운 삶에 대한 욕구와 충동이 격렬히 제기되면서 그 해답을 농산어촌의 순수한 생산력 향상과 인간다운 모습의 정(情)의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전통문화예술, 오염에 찌들지 않은 경관,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산식품 수요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대두되면서 농촌에 찾아가 웰빙을 만끽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11월 11일 정부에 의해 “친환경유기농업의 원년”이 선포되면서부터 선구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친환경유기농업과 농촌의 자연자원, 문화자원 및 사회자원을 농촌다움(어메니티)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도시의 웰빙욕구 및 주 5일제 근무 그리고 고령사회의 노후복지(장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평창군의 효석 메밀꽃문화제 및 친환경농업 특구화와 ‘Happy 700’ 브랜드화, 함평군의 나비축제와 친환경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나르다’ 브랜드 상품개발, 포천군 교동마을의 팜스테이(Farm Stay) 프로그램 성공,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 개최 정기회를 통한 그린 이벤트(Green Event)의 성공, 서천군의 에메니티 자산화 운동 등은 도시 웰빙과 농촌에메니티를 활기차게 접목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농촌다움(어메니티) 자산화 운동에 공통되게 갖춰야 할 기본요소는 친환경 유기농축산업이며 전통적인 토착식품들의 가공판매를 지연(地緣)산업화 하는 것이다.

II. 溫故而知新的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인류가 지구상에서 농사(耕種農業)를 시작한 이래 20세기 후반의 약 50여년 기간은 급격한 화학비료와 농약 의존형 농업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대형기업농업이 관행화되면서 종자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일어났다. 특히 생물공학기술(Biotechnology)의 발달은 일명 프렌켄슈타인

식품이라 일컬어진 유전자변형(GMO, LMO) 농업기술마저 등장시켰다. 그 결과 범세계적인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와 무역확대가 진전되었다. 다른 한편 이 같은 화학·기계화농법으로 대표되는 현행 慣行농업은 급기야 범지구적인 자연자원환경의 파괴와 질적 저하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녹색혁명」이 흑색혁명(Black Revolution)으로 되 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무역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는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탄생하였는가 하면, 환경과 생태계 보전문제를 다루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1987년 제8차 위원회에서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경제발전 문제와 환경보전 문제를 통합하여 접근한 문자 그대로 생태학적 자원순환체제를 강조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국제지속가능농업협회(WSAA)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학적 농업)의 장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자연 파괴적이고 자원고갈적인 방식의 대형 기업농업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구촌과 인류의 안락한 삶이 지속되기 어렵다는데 세계 여론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21C 친환경 思潮의 큰 흐름이 그러하다.

지난 20세기의 농업문제는 오랜 기간 무조건 식량 및 섬유재료의 증산문제만 다루어왔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대량 과잉생산체제의 영농방식은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혼란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뿐인 지구자원의 소실, 환경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 시켰다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반성의 물결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그 대안이 다름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의 복귀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환경보전적 기술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전하고 높이고자 하는 사회 경제적 측면과 농촌 지역(공동)사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즉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관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방자치 행정권의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개념의 중심부분에는 언제나 가족농(family farming)과 그 단체활동(group action)이 있다. 이제까지의 대형 기업농(corporate farms) 위주의 생태파괴적인 대량생산 영농체제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단순히 옛날(古代) 방식의 자연농법에로의 복귀가 아니란 점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법은 자연(환경생태계)과의 공생, 공영이라는 면에서는 전통적인 자연농법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아울러 도모하는 현대 과학기술과의 접목(원용)이라는 면에서 그 차이점이 명료해진다.

이렇듯 지금 자원의 재생산과 재활용을 바탕으로 지방의 부존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각종 생물학적 물리적 과학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원용하여 일정한 생산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생산에 기여코자 하는 농법체제가 다름아닌 현대적 친환경 유기농업이다. 미국의 이른바 저투입농법(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 LISA), EC의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방화 농법과 환경특구(Environmentally Special Area : ESA) 농법, 그리고 일본의 SAYURI(Sustainable Agriculture Yield Under Reasonable Input)농법,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 지원농업(Community-Support Agriculture)」운동과 「지역사회 식품안보(Community Food Security)」운동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쿠바는 아예 전국의 농업체제를 유기농업 체제로 전환하고, 한편으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및 자연생태계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가족 유기

농업 및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운동을 권장하고, 다른한편 조상대대로의 전통농업기술에 비화학적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고난도 유기농업 기술의 농민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여성 주도의 섬세한 친자연적 농업방식과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환경적 영농 봉사활동(연 45일)을 병행함으로써 쿠바 전체적으로 환경·경제·생활방식을 통합하여 접근, 실천하고 있다.

요약하여 환경보전형 농법의 기본 패러다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회 이익추구, 경제개발과 환경지속성의 균형, 약탈농법이 아닌 순환형 총합농업체계, 생태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통 농업기술의 현대화(예, 유기농법) 그리고 소농 가족농 협동농업 체제의 강화 등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언제나 가족농과 도시 소비자 NGO간의 공동생명체적 연대체제가 전제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법은 이제 21세기 현대 주류사조로써 국제적 보편성을 띄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선진국가 등으로부터 더욱 강도 높게 “환경친화적 green practices”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침내 이들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가격이 20~30% 정도 비싸더라도 기꺼이 소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속가능한 소비체제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기업농 위주의 미국 농무성(USDA) 정책마저 2010년까지 순수 유기농산물의 생산비중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독일, 스위스 등 EU 국가들은 오래전에 이미 미국 단계를 넘어서 있다. 이들 유기농업 선진국가들은 역설적으로 쿠바의 성공적인 유기농업 전국화 경험을 따라 배우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관행의 화학농법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체계로의 대전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농업생태학(agroecology)적 개념과 원칙이 전제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Funes, F., 2002, p.XIII)

첫째, 현지 지역자원의 순환적인 이용과 有畜농업에 의한 농가 보유자원의 시너지효과(synergism)의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행적인 것이건 유기적인 것이건 외래적인 투입요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생태학적 기술과 생산요소를 농가단위 또는 마을 지역단위에서 적극 활용하는 농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부합하는 作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생물학적 유전학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농가 내부와 주변의 동식물 및 작물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확고히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조상대대로 전수되어 온 전통적인 농가 현장의 농업지식과 지혜를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로 삼아 거기에 다양한 생물학적 농업생태학적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유기농업 기술연구와 시험, 보급 과정에 반드시 현지농민들의 참여(participatory methods)하여 실용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 경제적 난관과 조건하에서도 농업생태학(agroecology) 지식과 기술연구야말로 기존의 농업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쿠바와 같은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구 자원과 환경이 점차 고갈돼 한계에 부딪친 현재와 미래의 달라진 여건하에서 범지구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III. 세계 주요국가의 친환경유기농업

1. 독일

1) 유기농업정책의 전개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일찍부터 각종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유기농업은 1924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학자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제창한 역동유기농법(Bio-dynamic farming)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 인증단체인 ‘Demeter’가 설립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기농업(bio-agriculture)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은 그 주요 배경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환경생태계를 보전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농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연적 생산감소와 안전한 식품생산이었다.

1950년대 이후 독일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56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면서 저렴한 양질의 식량을 공급하고, 동시에 농민에게는 적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은 생산을 더욱 늘려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적 관행농법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 부족 현상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문제와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손해와 국가적 비용발생 등 재정 문제가 동시에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유기(bio)농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조방화농업(粗放化農業) 프로그램과 유기농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EU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유럽 공동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1년 7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표시에 관한 EU 규정인 ‘Regulation(EEC) No 2092/91’이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독일은 EU 회원국중 최초로 유기농산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하여 통일적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재 독일에서 유기농업 부문에 활동하는 단체는 1924년에 설립되어 주로 유기농업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Demeter’를 비롯하여 1971년에 설립된 ‘Bioland’ 등 모두 9개 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독일 유기농업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Regulation(EEC) No 2092/91’에 의거하여 자체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을 정하고, 각 단체별로 회원 농가의 유기농업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체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여 유기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로 현재 독일의 유기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생산 및 유통

독일은 1989년 화학비료·농약 등 화학자재 투입 감소와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

투입·조방화농업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친환경농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조방화농업정책은 농업생산방식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생산량을 20% 이상 줄일 경우 정부가 해당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의 유기농가와 유기농업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2년 현재 유기농가는 15,628호로 전체 경지면적의 4.1%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기농가와 일반농가간의 경제상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농가의 수익이 일반농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1997년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수량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기농가의 경우가 일반농가에 비해 20%~50% 정도 적게 나타난 반면, 가격은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가의 유기농산물 생산 실태 검사는 ‘Regulation(EEC) No 2092/91’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Regulation(EEC) No 2092/91’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실태 검사시 지속가능성 여부 및 사용가능한 투입재의 목록, 생산 규칙, 토양비옥도의 유지 및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 대상은 유기농가는 물론 유기식품 가공업체, 수입업자를 모두 포괄한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유기농산물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 유기농산물이 EU의 규칙 및 규제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민간 검사기관 또는 정부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검사는 주로 민간 검사기관이 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민간 검사기관을 감독하고 그 검사 결과를 EU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는 16개 주에 걸쳐 50여 개의 공인된 민간 검사기관이 있고, 유기농가들이 소속된 유기농업 단체들은 이들 검사기관을 통해 소속 유기농가의 생산 실태를 검사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2. 스위스

1) 유기농업 정책 및 생산 현황과 유통

스위스의 유기농업은 독일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1924년 생물학적 ‘力動유기(Bio-dynamic) 농법’이 소개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후 1954년부터는 독일의 대표적인 유기농업단체 중의 하나인 ‘Demeter’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다. 1974년에는 유기농업연구소인 FiBL이 설립되면서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으로 유기농업이 본격 시작된 것은 1992년 농업법 개정 이후이다.

스위스는 1992년에 농업법을 개정하여 1993년부터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그 이후 전체 경지면적 중 유기재배면적 비중이 1993년 1.9%에서 1997년에 7%로 증가하는 등 유기농업이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다. 1992년 농업법 개정 이후 1993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순수 유기농가는 6,466호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친환경농업 관련 직접지불제는 그 대상이 다양하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지불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 친환경농업관련 직접지불제로는 ‘환경친화적 농업(유기농업

과 저투입농업), ‘동물애호적 축산 및 검사규격에 맞는 자유방목’, ‘친환경농업적 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은 스위스 연방농업청이 승인한 유기농업 및 저투입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이행하고 통제를 인정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며, 2002년 현재 유기농업의 경우는 ha당 2,000SFr(스위스 프랑) 이상, 저투입농업의 경우는 ha당 2,000SFr 미만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지일수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액 비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상적 직접지불제(31a조)는 대부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제(31b조)는 임의참가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02농업정책’에서는 31a조와 31b조 대신 ‘일반 직접지불제’와 ‘생태적 직접지불제’로 나누어 ‘일반 직접지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태적 직접지불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즉, ‘일반 직접지불’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환경 직접지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화학비료의 균형된 사용
- ② 농지면적의 7%가 급부대상의 친환경적 지역일 것
- ③ 정기적인 곡물 윤작
- ④ 적절한 토양보전, 적절한 병해충종합관리(IPM)
- ⑤ 가축의 보호 (animal welfare)

이는 향후 스위스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유기농업 및 저투입농업 등 지속가능형 농업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수년 내에 관행농업은 거의 없어지고, 유기농업이 15~20%, 저투입농업이 80~8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유기농산물 유통 동향

스위스의 유기농산물 유통은 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협으로는 ‘콥(COOP) 스위스’와 ‘미그로(MIGROS)’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콥 스위스’의 유기농산물 취급이 두드러 진다. ‘콥스위스’의 유기식품 상표인 ‘CoopNATURApian’의 매출액 추이는 1993년 21만SFr에서 1997년 232만SFr으로 4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콥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생협의 유기식품 취급 확대는 유기식품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층을 형성하는 등 스위스의 유기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EU의 직접지불 수급실태를 살펴 보자.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 공통농업정책(CAP)의 중간보고를 공표하였다. 직접지불은 가맹국이 직접 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모든 가맹국이 농업인 별로 각종 직접지불의 총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스를 제외한 EU 14개국의 2000년도 직접지불에 관한 농가별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호수가 가장 많은 계층은 1,250 유로 미만으로, 전체의 53.7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0만 유로 이상의 직접지불을 수급한 농가는 0.04%인 약 1,900호에 불과하다. 또, 상위 5%의 농가가 수급하는 직접지불의 합계금액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 직접지불은 농가가 수급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직접지불 전체로는 규제가 없다.

3. 캐나다

1) 유기농업 개황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중 기온이 낮고, 특히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아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친환경농업이 용이한 나라이다. 광대한 국토, 풍부한 환경자원과 물을 가진 이 나라의 친환경농업을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강원도, 경북, 충북 산악지대 농업이 이와 유사하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 5대 유기농업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캐나다의 유기재배 농산물 판매수입액은 전체 농가판매수익의 1.5% 정도이다. 캐나다의 순수 유기농가는 3,510호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저농약·무농약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등을 포함할 경우)으로 환산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은 전체 농산물 생산의 30% 정도이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채소·과수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유기재배 농산물 비중은 15%나 된다.

대부분의 유기재배 농산물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본, 유럽 및 동남아로 수출하고, 한국에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친환경농업은 정부(중앙정부와 주 정부), 유통업체, 대학·시험장, 생산자단체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 하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태평양에 인접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유기농업은 채소와 과일에 특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후지사과와 배, 그리고 체리를 개발하여 재배하고 있다.

캐나다 친환경농업은 대부분 3ha내의 소규모 가족농이 주도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광대한 나라임에도 친환경농업은 농-소-정의 긴밀한 협동네트웍을 형성하여 매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체인망을 구성하고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출을 위하여 가공·선별, 도·소매, 해외시장 개척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시민단체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기농장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지원운동(예; Glen Valley Organic Agriculture Coop),” 도시지역에 농민시장의 개설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용 슈퍼마켓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주(州)정부 중심으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유기농산물 기준을 1999년 4월 국제기준(Codex)의 규정에 준하여 국가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생태·환경의 보전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전부터 연방정부 농무성 산하의 18개 연구소들은 R&D를 통하여 유기농업기술의 과학화(예; 품종개량, 천적개발, 토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90년대부터 주 단위 품질인증 유기농산물 관리지침과 농가관리기준을 주 유기농업협회와 협의하여 제정·실시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활동의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과 중앙정부 시험장은 유기농업기술의 과학화를 위하여 병충해 방제를 위한 천적연구(예; UBC대학 내 실험농장 운영, 불임나방 대량 증식을 통한 해충방제, 성 페르몬 개발, 칠점 무당벌레에 의한 진딧물 퇴치 등)와 화학비료의 사용 감소를 위한 통합방제방식(IPM)과 작물영양연구(INM) 등을 수행하고 있다. 브리

티시 콜럼비아 주는 1989년에 유기농작물에 대한 성분 등의 규정을 제정한 이후로 1993년에 유기농업법을 제정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시작하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는 유기농업협회를 중심으로 일반농가의 유기농업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주로 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술, 자재보급과 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술지도는 가정 교사 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행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토록 집중지도 하고, 그 농가가 다시 이웃농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인증 로고의 인식과 유기농산물 애용의 필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지역별 유기농업단체들이 ISO65(유기농산물 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한 규범임)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업위원회 심의로 품질인증 민간업체를 결정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12개의 단체가 품질인증을 실시 중에 있고, 품질인증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는 농무성의 감사기능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소규모 가족농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캐나다의 친환경농업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입농산물은 저질'이라는 관념 하에 수입농축산물과 경쟁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CODEX 기준에 따라 캐나다 등의 친환경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 수입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유기농업에 각종 기술을 보편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함께 유통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IV.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 : 인류미래의 위대한 희망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일반 국민의 호응,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과학자 및 연구기관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1년 강화된 미국의 경제봉쇄에 이어 구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화학비료(연간 100만톤), 화학농약(연간 2만톤), 그리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기계 등 화학합성물질의 절대 부족 상황에서 쿠바는 1991년 9월 「평화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세계의 농업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근대화화학농업기술의 우산 속에서 세계화 된 시점에서 쿠바는 식량 및 농업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유기농업으로 해결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조사단은 이에 대하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한 바 있다.

어떻게 친자연적인 생태보전형 농업과 기계화·화학농업이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생산량도 크게 올리려는 쿠바식 유기농업의 틀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쿠바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반면 생산성향상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유기농업 실천 이전의 식량자급율(43%, 1990년) 보다 훨씬 높였고(95%), 총생산성도 초기 2년 기간에는 뒤떨어졌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일

반 관행농업 생산실적과 비슷해지고 1997년 이후 부터는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에서는 지난 10년동안 200여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데 비하여 쿠바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국민 건강 수준도 현저히 증가하여 병원 출입 환자 수도 30%나 줄어들었고 영아 사망률이 세계 제2위로 낮아졌다. 산림등 녹색지대 면적이 현저히 늘어나고 도시환경 생태계도 다시 살아났다. 10년 동안의 쿠바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게 되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환경의 지속적 순환과 현대적 과학적 생태농업으로서 자원의 지역내 순환과 생산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생태계의 지속성과 농업생산성의 지속성을 동시에 이룬 성공사례이다. 이러한 성공은 전통적 농업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생물학 등 현대과학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유기농업을 단순히 고부가가치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 시스템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이용가능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도 높이는 생명농업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그 실현수단으로서 쿠바는 적절한 토지개혁, 시장개혁, 흙살리기, 지역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의 현대적 부활(과학기술의 결합), 그리고 현장성과 지역성을 담보로 하는 광범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농민 참여 방법을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개선되고 환경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면서 농업 총생산량과 농가소득이 공히 향상된 것이다.

1. 토지개혁

쿠바혁명 성공(1959) 이후 전국 농지는 국가 직영농장이 80%, 국가 협동농장과 개인농장이 20% 내외였다. 하지만 1991년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쿠바 농업을 사탕수수, 커피, 담배 등 단작중심의 대규모 농장체제에서 유기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개인이나 조합에 대여하거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협동조직과 개별농가에게 분배하여 적정규모로 경영케 하는 과제부터 착수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단작중심의 생산양식이 적정 규모의 복합적 개별 농업체제로 전환하였다. 2002년말 국가 직영농장이 20% 내외이고 지역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경영농장(CPA)과 개인농장이 20% 내외, 가족농들의 협동체제인 생산기초농장(UBPC)이 60%에 이르게 되었다. 협동생산기초농장은 개인농장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로부터 유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된 농지에 설비 기자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구역안의 농지를 조합원에게 생산단위별로 분배해 경작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업은 가족단위의 영농규모에 기반을 두어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가의 경우 20% 내외의 자영농지와 80% 정도의 임대농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기농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흙 가꾸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유기농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가에게 임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토지를 돈 거래 수단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가꿀 사람이 맘 놓고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는 유기농업이 자리 잡을 수 없다. 본질적 의미에서 유기농업은 토지공개념이 공고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 흙 살리기

쿠바유기농업의 성공비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적 요인은 흙 살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생태계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역적 현장 흙 살리기에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정부, 공공조직 그리고 과학자 및 기술자가 총동원 되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토양연구소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이다. 중앙 본부는 물론 각 지역마다 토양연구소를 두어 토양의 지역별 객관적 성질을 연구하고 지도화하며 생명공학을 이용한 흙 살리기를 연구 보급하고, 토양보전 기능과 토양의 지역별 작물별 이용성을 연구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용가능한 음식물찌꺼기, 농가부산물, 가축분뇨를 이용한 농가당 지렁이퇴비 생산을 통해 생산성과 흙 살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등 지역순환 농업에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흙을 오염시키는 사회, 자연 등 주변환경의 개선과 단작 중심의 농업을 혼작, 간작, 윤작 중심의 전통적 작부체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과학기술의 현장적, 지역적 결합을 통해서 흙 살리기에 매달려 온 것이다.

흙 살리기가 불가능한 쓰레기 매립지 같은 토양오염지역 등에서는 작물을 심을 자리에 아예 30~40센티미터 깊이의 땅을 파 새로 이랑을 만들거나 소 여물통 또는 수로형 흙받이 틀을 만들어 당년에 유기농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쿠바인들은 흙을 살리지 않고서는 유기농업이 불가능하며, 작물별로 흙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미리 교육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학농약과 비료는 값 비싸고 구하기 힘든 반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기질 퇴비를 값싸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업을 제도화하여 매년 토양의 침식, 염류장애, 연작장애, 산성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갔다.

한국의 경우 토양의 생물성과 물리성 그리고 화학성을 분석하고 전통적 농업과 생명공학을 결합시켜 지역순환 농업과 흙 살리기에 주력해 온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일부 부서와 민간단체인 흙살림 연구소 정도가 있다. 특이한 것은 유기농업 진작을 위해 농민연구소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농민들만의 연구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흙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우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농민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 등과 더불어 국가 직영 또는 민간 토양연구소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도 지역 현장에 기초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과 흙 살리기를 위한 기존 전문연구기관의 강화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와 더불어, 환경부하가 걸리는 화학합성비료. 화학합성농약 공급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유기질 비료의 무상 공급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농가부산물, 그리고 낙엽, 산야초 등 자원을 활용한 순환농업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흙 살리기 운동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장차 항생제, 중금속 그리고 환경조절제(성장호르몬, 생식호르몬 등)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투여한 가축의 분뇨는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투여하는 공장식 축산퇴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바다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공장식 축산퇴비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다. 축산이 변해야 한다. 먼저 각종 축산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 축산으로 변해가면서 축산을 둘러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이 순환 보완하는 농업 형태로 변해야 한다. 음식물찌꺼기를 국가가 수거해서 돼지에게 먹이고 돼지 축사에糞, 톱밥 등 농산부산물을 넣어주고 그 퇴비를 농장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식탁과 가축에 되돌아가게 하는 제주도의 원래의 전통순환농업을 전국 각 지역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농가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려면 논농사와 잡곡농사의 친환경적 재배야말로 핵심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직불제를 현실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과 잡곡농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잡곡농사가 부활되면 토양개량효과도 무척 뛰어나다. 음식물찌꺼기의 비료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장경쟁에 맡긴 처리방식 혹은 부분지원 속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전국민적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거행위를 담당하거나 수거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전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와 (지렁이) 퇴비화는 유기농업 기반조성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순환농법의 정착

농업의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분권적 지방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 비결이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정책, 농업기술, 유통 그리고 생활환경 및 사회체제는 지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기농업연구소, 토양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등 각 연구기관도 지방 중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대규모 공장식 축산의 유기축산으로 전환, 음식물 찌꺼기의 재활용과 농가부산물의 사료화 퇴비화 등 지역내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고 있다.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그리고 생활환경의 지역내 순환체제를 이루고 있다. 바로 한국의 전통농업의 쿠바적 실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 및 정치경제구조가 중앙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정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도 중대도시를 겨냥한 도박성 현금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지역 순환농업체제가 정착되기 힘들다. 유통구조 역시 복잡하고, 생활재가 지역에서 순환할 수 없게 되어 온 국토가 쓰레기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농업위기를 해결할 최대화두는 지역 순환농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농업위기 뿐 아니라 사회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지방분권화와 지역순환농업 그리고 경제적 부의 지역균등이라 할 수 있겠다. 농정이 지방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실질적인 농정이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각 산하기구도 지방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도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기술진흥청과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역 밀착 연구 보급체제로 개편할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장에서 지역농민과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쿠바 연구진들이 농민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지역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며 연구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단작중심의 농업에서 윤작, 혼작, 간작을 실천해도 농가소득이 보전되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의 전면적 변혁과 생활재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4. 전통농업 기술의 현대적 계승 : 溫故而知新

쿠바는 1980년대 초부터 모든 과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전통농업 기술을 발굴하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대적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일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서 혼작, 간작 그리고 윤작 농업, 소경운, 복합영농 등 그들의 전통농업 형태를 오늘날 실정에 맞게 분업화시키고 미생물연구소, 토양연구소, 천연물질을 활용한 방제연구, 천적연구, 퇴비 개발, 흙 개발 등 현대적 과학기술을 지역현장에 정착시켜왔다.

제5회 국제유기농 심포지엄에 참석한 상당수의 외국인과 쿠바 농업대표자들은 한국의 전통농업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농업에 대한 보고 및 연구가 오히려 외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농업에 대한 연구는 세종 11년 '농사직설' 그리고 성종 때 강희맹의 '금양잡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전통농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정착시키는 것은 현재 농업소득의 측면에서 보나 농업기술체제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실행과 전통농업연구소의 설립 등을 통해 더 늦기 전에 2000여 년동안 검증되어진 경험적 과학으로서의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와 현대적 계승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학농법이 아닌 이러한 전통농업에 대한 재해석이 현대적 과학기술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유기농업의 보편화가 가능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토양연구소, 천적연구소, 천연물질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등이 활성화되어 전통기술과 접목한 현대적 과학기술의 지역현장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V.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및 어메니티 운동에의 시사점

1. 자립, 자조, 도농연대의 유기농 운동

2001년 7월에 이어 2002년 8월, 그리고 2003년 5월, 2004년 7월, 2004년 9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필자는 각각 농림부와 울진군 또는 대산농촌문화재단의 부분적인 재정지원하에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관련 민관 대표들을 인솔하여 캐나다와 미국, 일본, 쿠바 그리고 북유럽 알프스 산악지방의 유기농업 및 어메니티 현장 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2002년 연수 때는 British Columbia주의 수도가 있는 Victoria에서 제14차 세계유기농업 대표자회의가 열려 50여 개국 1,200여 명의 각국 유기농 관련자와 자리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유기농산품 전시회에 한국 유기농식품을 당당히 선보일 수 있었다. 2003년의 쿠바 연수는 하바나에서 열린 제5회 세계유기농대회에 27개국 600여 명의 지구촌 유기농 대표들과 우리 대표들이 함께 참석, 세계 유기농업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며 쿠바의 유기농업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새로이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울진군수를 비롯한 자문단의 캐나다, 미국, 쿠바 유기농 시찰여행 때는 현지 유기농업 대표자와 소비자단체, 행정가들과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북유럽 알프스 지역의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지의 산악지대 조건불리지역 농업을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생태계를 연

계시켜 관광자원화 하는 농산촌 어메니티(amenities) 자산화 현장을 살필 수 있었다.

이같은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국제화와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산화의 지평선을 확장하는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도시 유기농업 현장과 직거래 유통구조를 돌아보고 독일의 도시지역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작은 정원(Kleine Garten) 성공사례에서 크게 감동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 유기농업 제품이 한국으로의 진출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인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친환경농업을 지원 육성하고 불완전하나마 판로를 개척해주어 소비자들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역설적으로 외국의 유기농산물과 그 제품이 값싸고 맛있는 품질을 앞세워 언제든지 국내시장을 뚫고 들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미국, 캐나다, 일본, 쿠바,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한국유기농 시찰단과 동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 농민대표들의 단골질문의 하나가 “귀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의 국가예산으로 유기농업을 얼마씩 지원하는가”를 빠뜨리지 않고 묻고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유기농업 기술선진국인 캐나다는 물론 선진국 정부의 경우 EU(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가차원의 재정적 직접 지원은 없고 다만 기술개발과 유기농자재를 보급 지원하는 R&D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직접지불제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EU 국가에 국한되고 있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에도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거의 없다할 정도였다. 이 점은 2010년에 유기농산물의 비중을 10%로 목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통상적인 농업보조 이외에 특별한 유기농업 지원이라고는 NGO들에 의한 지역사회 농업지원프로그램(Community-Support-Agriculture)과 지역사회 식량안보운동(Community Food-Security Program) 등 유기농민과 NGO/NPO 조직들에 의한 유기농산물 지역소비촉진 운동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현장농업 체험 지원과 같은 도·농 연대사업을 그것도 200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크게 고무된 일은 일본에서였다. 2002년 10월, 일본 구마모토(熊本)에서 개최된 시민환경회의에서 참가하였을 때 일본 유기농민들이 NHK 방송에서 기획보도한 1시간짜리 “한국의 유기농업” 특집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身土不二, 農都不二” 라는 농업 슬로건을 그대로 옮겨 한 분과회의에서 집중 토론하고 있었다. 20~30년전부터 극히 최근까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선생(先生)” 역할을 자임하던 일본의 유기농민들이 모처럼 소비자와 정부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 기간 내내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업의 급성장 배경을 학습하며 한국 정책을 따라 배우자고 논의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필자에게 한국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성공 정책과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사례를 일일이 되물어 학습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얼음은 물에서 났으나 물보다 차다”는 선인들의 말이 생각났다. 심지어 구마모토 유기농업의 정신적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토구노 사다오(徳野貞雄) 교수 같은 이는 DJ 정부 초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 구호이었던 “벌레 먹고 못 생겨도, 더 맛있고 안전해요.”라는 표어와 “신토불이(身土不二) 농도불이(農都不二)” 라는 슬로건을 마치 일본 유기농운동의 모토로 만들 작정인양 일본 소비자 대표들과 구마모

토 유기농업연구회 하자마(間司) 이사장 및 오오구시(大和기) 구주 농정국장 등이 참석한 모임 등에서 수차례 소리 높여 제창케 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과거의 제자가 오늘의 선생이 된 듯한 착각을 한 때 가졌으나 다시 냉철히 최근의 우리 내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혹시나 누가 알까 두려워졌다.

그러다가 다시 캐나다와 미국 등 선진국의 유기농업 성장 배경과 세계 유기농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이 일편단심 비화학(非化學)적 유기농업 경영에 전심 전념해 온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마침내 도시 소비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심금을 움직여 유기농산물 수요 붐을 일으켰으며 지금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비료, 농약, GMO 곡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다국적 초국경기업들(MNC's/TNC's)의 반대 억압 로비와 싸워 이긴 결과이다. 연수단을 감격시킨 사건 중에는 UBC 농과대학 학생들이 3 ha의 대학건물 후보지를 농성 끝에 지켜내어 유기농업 시험장으로 만들고 밤낮으로 유기농업 현장 실습에 몰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현장 실습에서 자신을 얻은 학생들은 앞으로 일생을 캐나다의 유기농업 발전에 종사할 것임은 물론이다.

캐나다 BC주 과일생산의 65%를 담당하는 오키나간 골짜기의 과수 유기농민들은 일본과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후지사과와 체리의 유기재배에 성공, 이미 일본과 미국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R&D 지원을 바탕으로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이 유기농민들이 자력으로 협회를 조직, 선별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장마저 개척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이한 점은 바로 이곳의 중심부인 Summerland 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같은 역할의 중앙정부 농업시험장이 유기과수에 대한 품종, 기술, 자재, 천적의 개발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이 인상적이었다. 이 시험장에는 일본 등 수개국에서 정부 연구사들이 파견되어 있으나 아직껏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연구관을 호스트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동행한 우리나라 유기농대표들을 무안케 했다. 왜 우리나라의 과수농업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2. 우려되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현황

농림부는 1999년부터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2003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을 ha당 7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앞으로 ha당 100만 원대로 상향조정될 날도 머지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998년 11월 11일 제2회 농민의 날을 기해 정부가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하면서 직접지불제를 공표한 자리에서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필자가 유기농업단체 대표자들과 주고받은 우려와 다짐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은 과거 20~30년 동안 정부의 직접지원은 커녕 억압받는 정책 분위기에서 오로지 신앙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진 선구적인 농민(단체)들에 의해 묵묵히 실천되고 뿌리내려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1997년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그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21세기 친환경 세계 사조에 부응하고 WTO 개방체제와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직접 재정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설립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로 소비수요를 불러일으키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인증 추이, 1999~2003

연 도	유 기 농 ¹⁾		무 농 약		저 농 약		계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호수)	ha	(호수)	ha	(호수)	ha	(호수)	ha
1999년	355	231	449	262	502	383	1,306	875
2000년	353	296	1,060	876	1,035	867	2,448	2,039
2001년	442	449	1,645	1,293	2,591	2,811	4,678	4,553
2002년	1,505	1,601	4,084	3,727	6,303	5,911	11,892	11,240
2003년	2,749	4,654	7,426	6,756	13,127	12,155	23,302	23,564

주: ¹⁾ 전환기 유기농가 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표 2. 친환경 쌀 재배농가(인증) 추이, 1999~2003

대 안 농 업	농 가 호 수		재 배 면 적	
	호 수	비 율 (%)	ha	비 율 (%)
유 기 농 ¹⁾	1,547	(14.9)	1,546	(18.6)
무 농 약	4,666	(44.8)	3,772	(45.3)
저 농 약	4,200	(40.3)	3,004	(36.1)
계	10,413	(100.0)	8,322	(100.0)

주: ¹⁾ 전환기 유기농 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그와 동시에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를,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신설하고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처음으로 제정 실시하고 그에 앞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담당케 했다. 다른 한편, 전국의 농협 하나로 매장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케 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수백의 크고 작은 친환경농업 특구를 지정하였고 퇴비증산과 유기농 자재지원 그리고 농·소·정 협력사업으로 녹색관광 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실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산물의 중요성, 즉, 환경생태계 보전효과와 소비자 건강, 생명에 대한 안정성을 일깨우게 하였다.

끝이어 정부는 친환경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 시행하였다. 1차적으로 정부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완전유기농업을 구분 지원했으나 장차 그 생산 및 소비규모가 커질 경우 유기농산물을 독립 표시하고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은 “우수 농산물(GAP: Good Agricultural Product)”로 별도 지원할 구상이었다. 특

히 소비자들에게는 “별레 먹고 못 생겨도 더 맛있고 안전해요.” 라는 표어를 널리 홍보하고 네가지 품질인증 마크를 인지도시켰다. 그 결과 1999년에서 2003년 5년 사이에 친환경농업은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어 전국적으로 인증면적 기준 27배, 인증농가 기준 18배의 증가라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되었다.

1) 사이비 친환경농업인

그러나 만약 정부의 재정지원만 믿고 무임승차한 자질이 의심되는 농가들이 사전교육과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친환경농업에 뛰어 들 경우 불행한 사태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유기농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 인증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최근에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듯이 손쉬운 저농약 친환경농업에만 안주할 경우 어떻게 유기농을 육성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순수 유기농업만 권장할 경우 3~5년이 소요되는 기간 농가지원 방법과 체제가 묘연하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5년 후, 즉 2004년도부터선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하고 “좋은 농산물(Good Agricultural Product)”로 전환시키고 다시 5년 후엔 “무농약” 인증마저 폐지하여 “유기농산물”만 인증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시행결과를 검토해 볼 때 심상치 않게 사이비 유기농산물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유기농산물 수요를 급감시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너무 값이 비싸져 외국의 값싼 유기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수도 있다. 유기농단체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교육 감독하여 유사(사이비) 친환경 농가들이 발붙일 틈을 사전에 막고 생산비를 더욱 낮춰 판매가격을 내리는데 계속 노력해야 우리 유기농업이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혹시라도 사이비 유사 유기농가들이 작당하여 혼한 말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가 권장했으니 정부가 보상하라고 들고 일어서는 사례 역시 절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 수많은 친환경 농산물 애용 소비자들이 이러한 일부 천민상업적인 농민들의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등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에 유기농업 대표들과 함께 우려한 바 있었다. 그래서 수구초심, 초지일관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하늘도 살리며, 소비자와 건강을 지키는 농사”를 짓겠다는 신념과 철학을 두루 공유하도록 자체 교육과 계몽으로 사전에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지속할 경우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 소비자와 정부가 보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기농업 실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다짐했었다.

이것이 20~30년전부터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기농 선구자 농민들의 일관된 근심이며 철학이다. 최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4년(1999~2003) 사이에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수가 18배가 늘어나 2003년 말 현재 어느덧 23,302 농가로서 전체 농가의 1.8%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10만호, 20만호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앞서 걱정한 우려들이 사실로 나타나 오히려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에 큰 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 그런 조짐이 최근 이곳 저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여 선의의 모든 친환경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 흙과 물과 하늘과 생명농업에 정직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내부의 부정적인 요인을

자율적으로 제거할 “채찍과 당근”정책이 필요하다. 담당기관에 대해 지도, 감독, 지원업무의 예산과 기구를 대폭 확대해 주고 끊임없이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반복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2)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곳으로

“이상과 도덕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되, 실천과 협동은 더 낮은 곳을 찾아 가는” 유기농업 철학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단체들의 공식입장, 즉 앞으로 나아 갈 목표로 채택되었으면 한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초심(初心)을 다시 다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자나 사 먹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돈이나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유기농업의 궁극적인 실천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그 동안의 선진유기농 연수에서 수없이 보아 왔다. 유기농으로 돈을 벌고 소득을 늘린다고 보다는 참 농부의 이상과 농심(農心)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하늘의 선물)이어야 참 유기농업이다. 하늘과 땅과 물과 생명을 살리려고 구슬땀을 흘릴 때 하늘은 반드시 도시소비자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친환경 유기농업을 복돋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려니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갈 때이다.

3.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과 남북한 농업협력

2003년 5월의 쿠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다시 확인한 바이지만, 쿠바는 전체 농민과 농업이 모두 친환경 유기농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인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소 적시에 조달할 수 없었던 상황하에서 선택하게 된 유일한 농법이었다고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과 기술 개발을 준비해 온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21세기 세계 사조(思潮)의 주류가 되고 있는 세기적 대변혁 시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담배, 사탕수수, 커피 등 단작 화학농업의 대표주자였던 쿠바가 친환경 유기농법이 세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역사의 엄연한 아이러니(逆說)라 할 수 있다. 이미 정농회(正農會)가 발행한 21세기의 모델 “쿠바의 유기농업(가네꼬 요시노리 외 지음)”과 환경농업단체 연합회가 발행(2003. 10)한 “인류 미래의 희망, 쿠바의 유기농업” 그리고 쿠바 농업기술청과 유기농본부가가 주최한 국제연찬회의에서 발표된 사례는 기술청 소속의 모든 연구소와 연구원들이 “조상대대로의 토착농법을 현대적 생물과학기술과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하고 겸하여 생태환경과 소비자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유기농 기술을 개발 보급하였다. 그로인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나아가서 쿠바의 식량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검증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유기농업 기술수준을 전국의 유기농민과 정부 당국이 합심 노력하면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캐나다 UBC의 초청으로 2002년 10월 31일~11월 7일까지 밴쿠버와 BC주를 방문한 북한농업 행정가 및 학자 일행 4명이 역시 열심히 이곳의 유기농법을 연수하고 귀국하면서 자국내 식량 및 부존자원 현상을 들어 친환경 농업분야로의 본격적인 전환가능성에 대해 회의하고 고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쿠바와 여러모로 국제 정치경제환경이 비슷한 북한 농업으로서는 유기자재 공급만 원활히 확보된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현대적 친환경 유기농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성숙되지 않음에 아쉬워하고 있었다. 즉, 북한의 현실은 일부 미생물 제제의 개발

경험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유기질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과감히 유기농업으로 정책전환을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이는 남북한간의 농업협력분야 과제의 하나로 우리 민관이 북한에 친환경 유기농업의 자재, 기술을 제공하고 이의 가공 판매(무역) 분야에 적극 협력할 수 있음을 뜻한다. 국내에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혐오산업으로 지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 축산분뇨를 정부 주도로 산야의 부산물과 섞어 퇴비화 시켜 그렇게 제조된 국제규격의 유기질비료를 남북한의 유기농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1석 3조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일을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면 지자체나 농업인·시민단체라도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VI.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방향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가 선포되어 친환경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가 생명·환경산업이므로 이 부문이 일반화될 경우 21세기 생명·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1.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선 방향

첫째,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국제기준에 고려되도록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꾸준히 보강해야 한다.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WTO 체제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외국의 유기농산물 및 식품 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하여 국내산과 동등한 현지 확인조사와 수입허가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규를 보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 육성정책과 무역(수입)대책 수립이 적극 요청된다.

본래 CODEX 기준을 작성하는데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한 장소에서 유기자원과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순환농업이 가능한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벼농사가 중심인 아시아 지역의 농업현실과는 맞지 않는 기준이 많다. 국내산 유기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동양식품을 생산해내는 한·중·일 3국이 공동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IFOAM과 같은 국제유기농업단체 등을 통하여 영농규모가 영세한 아시아 지역의 농업특징을 반영한 공통규범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시아 국가의 유기농업 생산조건 및 소비식품 문화가 구미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동북아시아형 유기농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공장식 현행 축산경영을 양계, 한우, 낙농, 산양 등부터 우선적으로 유기축산으로 점차 전환해 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밀집형 공장식 축산의 형태로 발전하

여 왔다. 가축의 사양체계는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화되었고 가축의 복지와 동물의 권리를 도외시한 채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료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생제, 성장촉진제, 그 밖의 질병예방 약품과 첨가물이 과용 또는 남용되어 축산물의 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돈콜레라, 뉴캐슬병, 구제역, 광우병 등은 환경오염과 약품 및 농후사료 남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점차 전문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보다 책임 있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나, 이들 정부대행,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감독 및 벌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유기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 및 표시 등의 기준이 하루빨리 통합 정비되도록 친환경농업법과 식품위생법을 통합 개정하여 문자 그대로 농식품행정이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일원화되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취급하는 유통·판매·가공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와 감독 관리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기농축산업 성공의 필수조건인 자재와 기술보급이 국가 주도로 행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과 예산과 기구가 보장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유기질 비료와 천연 농약, 천적 개발과 배양, 보급, 미생물 농약의 개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흙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2. 친환경농업 정책의 과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농업생산의 경제성과 생산성 확보, 자원과 환경생태계 보전, 인간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토양의 보전,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축, 농업의 환경정화산업화, 농업 폐기물 재활용,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등이다.

이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새로운 농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농업 기술과 유기질 자재의 개발 보급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양의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이 본격화된 지난 40여년 이전까지 무려 5천여 년 이상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지탱해 오던 비화학적 전통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거기에 현대과학기술(생물학적, 물리학적, 전자기술 등)과 접목하여 농가수준에서 이용이 간편하고 생산성이 높은 현대적 유기농법을 적극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이른바 온고이저신(溫故而知新)의 새 농법이 창안되어야 한다. 본래 농업과 같이 완전경쟁 구조를 갖는 산업에서는 독점산업과는 달리 기술개발 투자분야는 농진청 등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이 농업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보급되지 못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대부분 고비용 때문임을 적시하여 미생물 농약, 생물학적 기술과 제재, 유기질 퇴비 등에 대한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과 민간연구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친환경농업 자재는 주로 영세 벤처기업이 공급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약하다. 미생물 농약이나 유기질 비료 등은 토착적인 것이어야 유기농업의 현지화가 가능하므로 손쉽게 수입재제에 의존하는 미생물 농약이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미생물을 외국의 수입산에 의존하다가 큰 화를 자초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이 중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이 관행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서 생산자는 약간의 프리미엄 가격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비 또한 높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도는 환경재로서의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보험제도의 실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③ 지역단위별 친환경농업 생산주체를 육성하되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단위형이나 읍면 단위형, 시군 단위형으로 발전시켜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지키기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캐나다와 미국의 “지역주민후원 유기농운동”을 참조하여 지방 소비와 학교급식에 유기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소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유기축산과 가공부문을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

외국의 유기축산물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면 우리의 축산업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 또한, 경종농업에 필요한 유기자재의 순환적인 자원이용 차원에서도 친환경·유기축산, 즉 유축농업의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기식품의 표시기준을 국제화하고 수입 유기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현지방문 검사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국의 사이비 유기식품의 범람이 우려된다.

⑤ 지역단위로 유기자원의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업부문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업, 축산업, 경종농업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단위에서 임업, 축산업, 경종업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이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 축협, 임협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친환경농업 연합체(가칭)」의 결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나아가 가장 일차적으로 환경보전이 잘된 한계지역, 간척지, 조건불리지역 등을 시작으로 대규모 ‘친환경농업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⑥ 친환경농업 정책심의를 위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현장 실천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조건과 농가경영규모, 작물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 기준을 정기적으로 심의 강화(예,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 분류에서 삭제 검토)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와 더불어 종합적인 농도배양 추진 및 축산분뇨 자원화와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⑦ 농사란 원래 현지(local)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보급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도별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 대학, 지역농협,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Task Force 또는 지역단위 유기농업연구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품목별 경영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전한 토양의 조성을 위해 안전한 농자재의 자가 생산 활용, 오염되지 않은 물의 이용, 자원절약형 농업, 친환경농업 전문단지화하고 생산품목의 다양화, 건강 기능성 농산물 개발 및 명품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단위 연구소와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⑧ 농-소-협-학-정 협동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과 품질관리,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직장 및 도시의 생협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여성 인력이 유기농업 실천운동에 다목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⑨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현실조건과 미래지향에 맞게 개정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들을 우수농산물(Good Agriculture Product)로 분류, 지원은 계속하되 유기농산물(Organic Food)은 독립해 품질 표시·인증해야 할 때가 되었다.

VII. 참 고 문 헌

1. 구도완, 「환경위기와 녹색국가」, 「환경정책」, 제10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2002. 3.
2. 김박수, 「신정부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신정부의 경제개혁과제』 (창립10주년 기념심포지엄자료집),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3.
3. 김성훈·권광식, 「자원 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03.
4. 김성훈·권광식,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03.
5. 김종숙, Codex 유기식품 기준 제정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농업의 전망(환경농산물 품질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심포지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
6. 김지원, 「환경정책 평가지표의 개발」, 「논문집」, 제35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7. 김창길,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 「제6차 KREI·농어업특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8.
8. 민승규, 「환경과 식량문제」,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2.
9. 서종혁,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과 동북아시아 농업구조(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11.

10. 이태근, “흙을 살리는 길”,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종합교육연수원, 2002.
11. 최덕천, “21세기 환경산업의 전망”,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종합교육연수원, 2002.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odex 유기식품 기준 제정에 따른 대응, 1999. 7.
13. 농림부,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2003.
14.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2(번역본)」, 도서출판 도요새, 2002.
15. 한국유기성폐기자원학회 편, 「농축산 폐기물의 퇴비화」, 동화기술, 1999.
16. 蔦谷榮一, “我が國における持続型農業展開の課題”, 農林金融 1999. 9, 農林中央金庫
17. 古澤 廣祐, オーガニックフーズの國際動向と課題, 富民協會·毎日新聞社, 1998. 8.
18. 今村 奈良臣, 日本における環境保全型農業の發展方向(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11.
19. 農林水産省 食品流通局,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の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1999. 7日本經濟新聞, 1999. 1. 16日字
20. Kim Chang-Gil & Kim Tae-Young, “Economics of Conversion to Environmentally-Friendly Practices of Rice Producti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7, No. 2, Winter 2004.
21. Manon Haccius, Organic Farming as a Strategy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11.
22. Hanspeter Schmidt·Manon Haccius, EU Regulation “Organic Farming”(A Legal and Agro-Ecological Commentary on the EU’s Council Regulation(EEC) No. 2092/91), 1998.
23. David H.F. Liu, Bela G. Liptak,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Pollution, Lewis Publishers, 2000.
24. Cutler J. Cleveland·David I. Stern : Robert Costanza, The Economics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2001.
25.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Trade Concern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Technology and Natural Resources, Mauritius, May 31, 2001. 9.
26. F. Funes, et. al.,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esistance, Transforming Food Production in Cuba」, Food First Books, Oakland, California, 2002.